

UN 푸드시스템 국내 논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2차 회의 계획

□ 회의 개요

- 주최 및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주관
- 개최 목적 : UN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서 국내 논의를 진행하여 '식량안보' 세부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계획 수립
- 일시 및 장소 : '21.4.21(수) 14:00~16:00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78, H호텔 세종시티 4층 대연회장
- 참석 대상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산업계 및 관련 협회, 시민사회단체/공공기관,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0명 내외

□ 진행 순서(안)

구성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부 발제	14:00-14:05	5'	· 인사 말씀	KREI 우병준 박사
	14:05-14:20	15'	· UN 푸드시스템 논의 현황 소개 - 국제 논의 및 국내 논의 추진 상황	농식품부 김경은 서기관
	14:20-14:30	10'	· '식량 안보' 관련 내용 소개 - 농특위 국가식량계획 중심으로	농식품부 김정락 서기관
2부 토론 좌장 우병준 박사	14:30-15:55	85'	· 토론 : '식량 안보'를 중심으로 ① 안정적 식량 공급 ② 자급기반 유지 ③ 위기대응력 강화	토론자
	15:55-16:00	5'	· 논의 정리 및 마무리	KREI 우병준 박사

- (배경)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예정
 - * 푸드시스템: 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먹거리를 둘러싼 환경 전반
 - 코로나19, 기후변화, 국제분쟁으로 인해 '30년까지 기아종식 등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존재
 - UN 사무총장은 SDGs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개선방안(pathway)을 논의할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19)
 - * 일시: UN 총회(9.21(화)~27(월)) 계기, 장소: 미국 뉴욕

 - (UN준비동향) UN은 정상회의 준비 사무국을 구성하고 SDGs 달성을 위한 5대 실천분야를 제시
 - UN은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위원장 아그네스 칼리바타 (Agnes Kalibata)를 정상회의 특임대사로 임명
 - 5대 실천분야(Action Track) 팀과 과학그룹이 각 분야별 논의를 정리하고, 국제기구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가 자문 역할
- < 5대 실천분야 >**

 - 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
 - ②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
 - ③ 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
 - ④ 평등한 생계·가치 배분 촉진
 - ⑤ 취약계층·충격 등에 대한 식품시스템 복원력 증진
- UN 정상회의 사무국과 에너지·보건 등 타 분야 국제기구가 공동 주관하는 글로벌논의를 2차례 실시('20.12월 푸드시스템, '21.1월 에너지)
 - * 차기 글로벌논의: 4.22일 뉴욕, '수자원과 푸드시스템' 주제
 - 실천분야(Action Track) 팀은 분야별 개선방안(game changing solution) 관련 의견 수렴 및 온라인 설명회, 공개세미나 진행
 - * 이후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그룹과 협업하여 보고서 작성 예정
 - 그 외 민간분야, 농업인·생산자단체, 원주민(토착민) 등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별로 논의 진행

- (국내논의 가이드라인) UN은 “사람을 위한 정상회의(people’s summit)”를 목표로 다양한 논의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제안
 - 국내논의 원칙으로 다양한 참여자, 표준화된 형식, 명확한 주제, 정량·정성적 결과물 도출을 제시
 - 국내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을 지정하고 주요 관심분야 및 논의 주제를 지정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
 - 3단계 논의 권고: (1단계) 국내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 및 현황 파악 → (2단계) 지역별·분야별 세부논의 진행 → (3단계)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국내논의 결과는 논의 종료 후 2주 내에 UN에 통보하여 다른 국가들과 공유(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논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 (타국 동향) 4.13일 기준 미국·일본·러시아 등 73개국이 의장을 지정하고 15개국*이 국내 논의를 진행하였음을 UN에 통보
 - * 미국, 일본,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스웨덴, 핀란드, 나이지리아, 과테말라, 스위스 등
 - 미국은 UN 회원국 중 처음으로 국내논의를 개최하여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의의를 설명, 4~6월간 추가 논의 예정
 - * 1.13일, 176명 참여, 의장: USDA
 - 일본은 농림수산성 전문가협의회 등 소규모 의견수렴 회의를 중심으로 23차례 국내논의 개최(의장: 농림수산성 심의관)
- (향후 일정) 글로벌 논의 참여(‘20.11~’21.6) → 국내 논의 진행(‘21.3~6) → 장관급 사전회의(‘21.7, 로마) → 정상회의(‘21.9, 뉴욕)
 - 정상회의 시 UN사무총장이 세계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모아 행동선언(Statement of Action)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 (현황) 농특위 국가식량계획을 기반으로 올해 9월로 예정된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1차 국내논의 실시*(21.3.30.)
 - *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UN에서 진행중인 논의를 소개하고, 토론을 실시하여 향후 논의할 주제, 국내 논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전반적으로 ① 식량안보, ②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③ 먹거리 보장의 크게 3가지로 향후 논의 주제를 정하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였음
-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 뿐 아니라 관계 부처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
 - 부처와 협의하여 향후 국내 논의(3차~5차) 진행 과정에 참여 예정
- (진행 방식) 농특위 국가식량계획 각 주제별로 2~4차 회의를 실시하여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5차 회의에서 국회와 함께 종합토론 개최 예정
 - * 2차 회의(식량안보, 4.20)→3차(지속가능한 생산·소비, 4.27)→4차(먹거리 보장, 5월)→5차(종합, 5월)
- 회의는 크게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 농식품부에서 UN 논의 현황 및 해당 주제를 소개하고 KREI 전문가 주제 하 토론 실시
- (주요 참석자) 생산자단체는 모든 회의에 참여, 이외에 소비자단체·학계·산업계·시민사회단체·공공기관 등은 해당 주제를 고려하여 섭외

2차 회의 식량안보	생산자단체(한농연, 전농)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학계/연구계(식품자원경제, 국제개발연구소 등) 산업계 및 관련협회(식품산업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 시민사회단체/공공기관(농협경제연구소, WFP, 농정연구센터 등)
3차 회의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생산자단체(한농연, 전농) 소비자단체(녹색소비자연대) 학계/연구계(식품자원경제, 경영, 자원순환, 축산과학, 환경공학 등) 시민사회단체(한살림, 지역농업네트워크, 녹색전환연구소, 아이쿱생협 등) 정부부처(환경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지역푸드플랜 담당자 등)
4차 회의 먹거리 보장	생산자단체(한농연, 전농) 소비자단체(C&I소비자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 학계/연구계(농업경제, 사회복지·보건, 식품영양, 급식관리 등) 시민사회단체(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 정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1. 개요

- (목적) UN 푸드 정상회의(9월) 前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 (일시/장소) '21.3.30.(화) 14:00~16:20 / 서울 LW컨벤션(유튜브 생중계)
- (참석) KREI, 농식품부, 농특위, 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10여명
 - * 주제 : KREI 원장 / 발제 : 정상회의의 의의(UN 자문위원, 영상), 정상회의·국내논의 개요(농식품부), 국가식량계획(농특위), 농업인·소비자 전문가 인식 설문결과(KREI)
 - ** 토론자 : 농축산연합(김광천 사무총장), 한농연(최흥식 수석부회장), 전여농(오순이 정책위원장), 청년농업인연합(강선아 회장), 소비자단체협의회(원영희 회장), 농특위 농수산식품 분과(곽금순 위원장), 서울대 임정빈 교수, 소비자정책연구소 문은숙 대표 등

2. 주요 논의 사항

- (공통) 우리나라 푸드시스템 개선을 위해 ① 식량안보, ②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③ 먹거리 보장의 3가지로 논의 주제를 정하는 것에 대부분 공감
 - 다만,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관계자마다 입장 차이가 있고,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부처·범국민 참여 요청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논의 주제로 바람직 (한농연) 다양한 이해관계자(중앙-지자체-시민사회) 간 포괄적 토론 필요, (농축산연합, 임정빈 교수) 교육부, 국방부, 복지부 등도 해당 논의 참여 필요
- (식량안보) 공공급식에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농축산연합), 농업 생산인력 확보(청년),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지확보 및 농산물 공공수급제*(전여농) 등 강조
 - * 쌀·밀·콩·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을 선정하여, 공공비축 실시 및 공공급식에 활용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농축산물 저탄소 인증제 내실화 및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임정빈 교수), 탈탄소 연착륙을 위한 농업인 지원(농축산연합) 요구
- (먹거리 보장) 취약계층 및 가구 단위별 맞춤형 식량 보장(임정빈 교수), 100% 먹거리 보장* 및 영양 교육(문은숙 대표) 등 언급
 - * 우리나라 국민 약 10%(500만명)가 먹거리 빈곤층에 해당, 건강 격차 발생(국민건강영양조사)

붙임4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국가식량계획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먹거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며 누구나 보장받아야할 기본권으로 인식되는 추세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통합적인 해결 노력 필요
 - * 유럽, 북미 등은 '10년 이후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정책 추진
-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식량안보 중요성은 높아지고, 농산물 수급 불안, 소득에 따른 먹거리 접근성 격차 확대 등은 심화

□ 정의 및 추진 체계

- (정의) 국민의 먹거리 관련 국내·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범부처 통합 전략

비전	식량안보 강화와 국민 먹거리 보장 실현	
기본 방향	①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 자급기반 확대 ②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 기반 구축 ③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실현	
중점 과제	식량안보	(국가) 식량자급력 제고 및 생산기반 강화 (지역) 지역단위 생산·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국제)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 국제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친환경·탄소감축) 탄소중립·생태 농어업 전환 (먹거리 손실 저감) 음식물류 손실·폐기 감축 (인식 제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강화
	먹거리 보장	(영양·건강)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안전한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 개선 (공공성 강화) 생애 전 주기, 차별 없는 먹거리 제공
추진체계	(통합추진체계) 통합적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협업·민관 협치 기반 및 법적 근거 마련	

□ 중점과제별 추진 계획

①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 자급기반 확대

- ① 밀·콩의 자급 역량을 높이고, 조기경보시스템 등 위기 대응 체계 개선
 - 밀·콩 규모화·전문화된 생산체계 구축, 소비확대, 비축물량 확대
 - 선제적으로 위기 상황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미래 식량자원(식물성·곤충 단백질 등) 기술 개발
- ② 지역에서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 제도적 기반인 지역 푸드플랜을 확대·내실화하고, 중소농어가 중심의 수요기반 기획생산 체계 구축
 -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확대와 브랜딩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
- ③ 세계 기아인구 감소, 국제곡물 위기 대응 등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농업분야 ODA를 통해 협력국가에 기술 교육, 시설·장비, 마을 개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저개발국 등에 대한 식량 지원 점진적 확대
 - 자금 지원,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민간의 해외 곡물사업 진출 뒷받침

② 올바른 식생활을 바탕으로 먹거리 산업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제고

- ① 관행 농어업을 자원순환형 농어업으로 전환하고 탄소흡수 기반 구축
 - 농업분야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선택형 직불제 정착, 양분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제도 운영
 - 숲 가꾸기 등 산림·해양을 활용하여 농업·농촌 넷제로(net zero) 기반 구축
- ② 생산·수확-유통-소비-처리 전 단계에서 음식물류 손실·폐기 감축
 - 생산·소비 예측 고도화,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 등을 통해 산지 폐기를 최소화하고, 일자 표기방식 개선 등으로 유통단계 손실 저감
 -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목표 설정, 교육·홍보·기부활성화 캠페인 등 대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용 등 자원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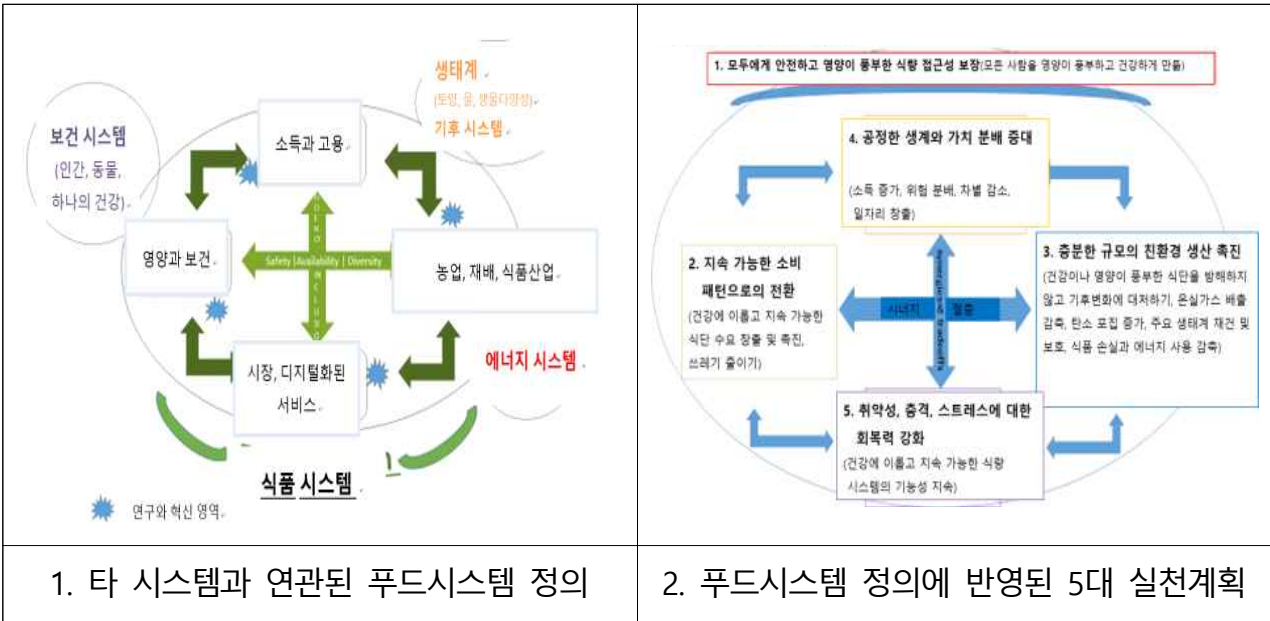
- ③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강화
 - 미래세대(교육과정에 포함), 성인(찾아가는 교육), 취약계층(지원 사업 연계) 등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실천기반 마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홍보, 친환경·로컬푸드 체험 교육 등 병행

3 생애 전 주기 먹거리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 ① 균형잡힌 식생활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사업 지원 및 영양 관리
 - 어린이(비만 예방 프로그램, 과일간식), 청소년(고카페인 식품 제한), 노년층(유형별 영양관리)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개편·확대
 - 영양 표시 의무대상 확대,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나트륨·당류 저감화 유도
- ② 안전한 생산·수입·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사고 관리 역량 강화
 - 토양·수질 관리 등 안전한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PLS 정착·확대 등을 통해 위해요인 선제적 차단
 - 1인 가구 확대, 비대면 식품유통 증가 등 트렌드를 반영한 안전관리
 - 식중독 원인물질 정보 확대 등 식품사고 신속 조치·차단 기반 마련
- ③ 생애 전 주기 차별없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역할 강화
 - 어린이(과일간식), 임산부(친환경농산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은 바우처 중심 먹거리 통합지원 프로그램으로 개편
 - 학교·공공급식은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품질 및 관리체계 개선
 -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사업 추진

□ 추진체계 구축

-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식량안보 차원 과제는 농식품부·해수부 중심으로 추진, 안전·환경 등 복합 이슈는 농특위를 중심으로 협의하는 등 범부처 논의 지속
- 지역 푸드플랜 확산, 사회협약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민관 거버넌스 구축



□ 푸드시스템의 포괄적 정의

농업, 임업, 수산업, 식품산업에서 유래하는 식품의 생산, 집하, 가공, 유통, 소비, 처리와 관련된 부가가치 활동과 이들이 속해 있는 더 넓은 범위의 경제, 사회, 자연환경을 포괄

- (생산) 농업(축산, 임업, 수산업 포함)과 식품산업의 생산
 - 생산주체인 농촌 및 생산이전의 비료·종자 등 투입산업 등 포함
- (식량안보) 미래세대에게 식량 안보와 영양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경제, 환경적 기반이 저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식량안보와 영양을 제공
- (기후변화) UN 2030 목표와 기후중립 및 SDGs 달성을 반영
- (바이오에너지산업) 순환 바이오 경제* 개념도 포함
 - * △농업생산과 식품가공에 사용되는 에너지, △생산 및 식품 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거나 완화

1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

- (배경) 무역, 도시화, 빈곤 등으로 기아, 영양 불균형이 증가하는 반면, 글로벌 식량생산의 3분의 1은 식량손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짐
 - 이에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토지, 물, 비료 등의 1/4가 낭비되고 농업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차지, 토지 황폐화, 물부족, 생물다양성 감소 촉진
- (논의사항) △정책, 연구, 모니터링, 평가의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 △토양탄소격리 및 농업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 적용, △식품손실·음식물 쓰레기 감축, △영양과다·결핍을 조절하는 식생활 변화 주도 등 기아종식, 영양가 있는 식단에 대한 일반인 접근보장 등 논의

2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

- (배경) 식품은 환경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자, 가뭄-홍수 증가 등 주요 기상 이변의 가장 큰 희생양이며, 환경복원에 활용가능한 최선의 도구임
 - 이에 현재 식품 소비 패턴이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변해야함
- (논의사항) △공공조달, 물류·유통 등 식품공급망, △식품성분 조정, 1인분 용량 변경,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제품디자인 포장용기 전환, △도시-농촌의 연계 강화 등 논의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보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 논의

3 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

- (친환경적 식품생산 토대) △식품생산을 위한 과도한 토지전용으로부터 자연 생태계 보호, △기존 식품생산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 △훼손된 환경을 복원, 회복, △토지 일부를 보존을 위해 남김

- (논의사항) △지역단위 생산, 도시농업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농가, 농업전문가, 학계 등 지식개발 참여·강화, △천연비료, 식물 보호제, 질소고정생물 등 친환경 식품생산에 대한 지식·혁신 활성화, △참여자 인증시스템(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참여 보증제도 (Voluntary Sustainability Standards) 등 농촌지역의 권한 부여와 농가간 협력 도모, △사회적 기업·공정무역·협동조합 등에 대한 순환/연대경제 등과의 시너지 효과 확대 △친환경 식품생산의 마케팅, 가공시설 개선 등 논의

4 평등한 생계·가치 배분 촉진

- (배경) 가정,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차원에 만연한 불평등과 권력 불균형이 푸드시스템의 빈곤 경감, 평등한 생계를 달성하는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음
- (논의사항) 평등한 고용기회, 농촌 여성 농업인·소수민족 등 푸드시스템상 힘없는 소수자들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 방안등 논의

5 취약계층·충격 등에 대한 푸드시스템 복원력 증진

- (배경) 푸드시스템 내 모두가 불안정에 대비·참여하고 재난·위기시 모두에게 식량안보, 영양, 평등한 생계를 제공할 필요 있음
 - 식량안보 관점에서 농경지, 관개, 비료 등 투입요소 확대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산업들과의 토지, 물, 노동력 등 천연자원 사용에 있어 경쟁관계를 조정할 필요 있음
- (논의사항) △지역차원에서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코로나 19, 가뭄 등 재해 관리를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위험평가, 준비 등 리스크 공유 매커니즘 개발, △공공, 민간, 생산자 파트너십(4P, public-private-producers-partnership)을 통한 소규모 농가에 평등 증진, 사회보호 시스템 강화(푸드뱅크, 긴급식량창고, 영양공급을 위한 현금지원) 등 논의